

제22회 국무회의(5.20) 모두말씀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지난 3년 여간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하에
6대 분야 120대 국정과제에 매진해 왔습니다.
전례 없이 어려웠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행복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정과제는 정부에 따라 강조점이 다를 수 있고
또 방법론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정부들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국민 안전 △미래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와
같이, 정부의 임기와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할 과제들이
중심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경험했던
각 정부의 성과와 실패는
모두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했습니다.

늘 푸른 소나무의 나이테가 끊임없이 이어지듯,
이러한 자산들이 중단 없이 축적되어야

대한민국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국정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 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소상히 정리해 주시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하여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서 상속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상속세 과세의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증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제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십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5.20~25)도 시작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 꽃이 제대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선관위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관리체제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관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참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다가오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절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값진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여전히 우리가 갈망하는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
△연평 해전 승전기념식(제1연평해전 6.13·제2연평해전
6.29) 등 다양한 추모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훈부는 일상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전용사와 보훈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제신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제복 공직자'분들이

우리 사회의 영웅으로 예우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격에 걸맞은 보훈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